



## 지방분권화 시대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복구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다양한 집단이 표출한 의사를 집약하여 지방자치 입법·행정활동에 반영하는 대의기관이다.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올바른 지방자치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중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50여년의 연륜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시작한지 열 두 해가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나간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중앙집권적 정치와 행정 행태 속에서 우리의 습성이 길들여져 왔던 시대를 살아왔다.

권한 집중의 이익이 늘 존중되었고 민주방식 보다는 천편일률적인 획일성 중심의 정치와 행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어쩌면, 개발연대의 사고 방식이었고 우리나라가 반세기도 채 되기전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집중과 습성이 오히려 지방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

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지방자치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지방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대는 분권화 시대이자 탈 권위주의의 시대이다.

구시대의 유물인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비생산적인 발상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의하여 정부는 지난 7월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10월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요체인 지방분권특별법,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등 참여정부의 개혁 3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만을 고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율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분권형 국가운영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신뢰하고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기반인 셈이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앞



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모색해 보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의회 의위의 위상이 크게 영향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자치입법과 예산결산 승인, 견제와 감시를 그 중심기능으로 하고 있다.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관여를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로 대체된다고 할 때, 지방분권은 지방의회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분권화가 더욱 가속화될 경우, 지방의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또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최소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먼저 심사숙고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가 이러한 위상 변화와 늘어나는 입법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는 물론, 의원 스스로 입법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자치입법과 정책문제가 점차 전문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향후 의회제도의 성공여부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노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와 공청회 제도의 활용 등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회 연합조직을 통한 지방분권 활동지원과 사무발굴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전국 지방의회차원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하여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지방분권과 같은 의회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건의, 결의문·성

명서 채택 등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출한 것은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넷째, 도민과 함께 하는 선진의정 구현과 보다 차원 높은 대안을 제시하고 성숙한 자치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전념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은 권한에 따른 책임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일시에 주고 받을 수는 없겠으나 지방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이루어낼 때, 이 땅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어떤 한사람의 노력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주민, 자치단체, 지방의회, 중앙정부 등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고, 서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어우러진 분권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임으로서 국가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지방분권화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위상을 바꾸는 동시에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권화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보다 단단한 기반 위에 올려 놓는 것 또한 중요한 역사적 소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분권화가 어렵게 시작된 만큼, 21세기 선진의정을 지향한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아름답게 꽃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하겠다.

보다 큰 비전과 넓은 시각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때, 「民意의 殿堂」인 지방의회에 힘을 모아 주고 변함없는 성원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